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이 가야할 길

백희원

BIYN
(기본소득청‘소’년
네트워크) 회원

지역의 기후활동 단체에서 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였다. 이동 중에 이런 저런 수다가 시작되었는데 서울에서 온 한 참가자가 말했다.

“제로웨이스트 패키지를 살 게 아니라 결국 소비를 멈춰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도시에는 자연이 없잖아요. 일하고 돈버느라 받은 스트레스를 쇼핑 말고 풀 곳이 없어요.”

사람들은 공감의 제스처를 보냈다. 누군가 또 말을 보탰다.

“시발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쓰는 돈.”

하하하 모두 웃은 뒤 특별할 것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그 대수롭지 않음이 대수롭게 느껴졌다. 2019년 녹색당에서 공동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기후위기와 과소비 문화, 과중한 임금노동 사이의 인과성을 설명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야 현장이 현장인 만큼 기후감수성과 탈성장에 대한 고민이 깊은 이들이 모인 장소여서 나온 말이었을테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들 앞에선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 굳이 긴 서론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었다.

2012년 발족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자발적인 회원 조직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은 활동초기부터 기후위기를 중요한 시대적 배경으로 생각해왔다. 기후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엄연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지구의 온도는 이미 1도씨 올랐고 더 가파른 변화를 예기하고 있었다. 이 예측 가능한 변화가 우리들 각자의 삶의 공간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최소한의 예측가능한 기회와 자원이 보태져야했다.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충격이 빈부격차라는 경로를 따라 취약한 곳은 더 취약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므로, 최대한 그 충격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려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소득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의 맨 앞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기본소득 운동이 점차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다성적이고 다양한 내러티브로 분화되면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향을 향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어디까지 도달했을까? 2016년, 2017년 언론들은 19대 대선을 가리키며 기본소득을 차기 대선의 핵심 아젠다로 다뤘다.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사회적 경험과 기본소득당의 출현이 있었고, 지역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어지며 기본소득의 개념도 조금 더 유명한 시사상식이 되었지만, 기본소득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보다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속도가 아무래도 더 빨랐던 것 같다. 기후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움직인다. ESG 경영과 투자의 흐름을 공부하는 사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 비건 브랜드를 론칭하는 기업들, 절박함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와 대규모 행진을 조직하는 시민들과 활동가들. 내게 기후위기 시대의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하는 일은 이 움직임의 속에서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어디에 위치하며 누구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지 묻는 데서 시작된다.

질문에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내 시야를 공유하자면, 지난 5년 간 나는 2018년 하반기를 마지막으로 BIYN 운영진을 그만두고 회원이 되었고, 2019년에는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직을 맡았다. ‘배경’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던 기후위기에 대한 학습을 심화하고, 그 전망 안에서 정책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데 도전했는데, 그와 별개로 정당정치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개진해나가는 데 실패했던 것 같다. 이후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일하며 현장의 청년 연구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연구활동의 주제 중 한 꼭지는 기후였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청소년, 청년 세대의 기후이슈에 대한 민감도는 남달랐고 운동의 양상도 이전, 그러니까 2010년대의 청년 당사자 운동과는 사뭇 달랐다. 한편 2021년엔 처음으로 6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물론 구직 활동을 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일하지 않고 받는 일정 금액의 소득과 그 시간 동안의 생활은 실 권리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해주는 경험이었다. 꼭 필요했던 휴지기 이후에는 민간연구소인 ‘듣는연구소’에서 일하며 특정 직군 내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와 지역 이주를 모색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다. 모순적 설명이지만 ‘로컬’이라는 키워드는 블루오션 시장이면서 신자유주의적 질서에서 비껴난 대안적 사회였고, 이

장소에 맞는 청년들의 기대와 희망,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주 마주칠 수 있었다. 이 글은 이 시야 안에서 관점을 찾아나가는 글이다.

기후운동에서 내 눈에 띄는 키워드는 생산성이다.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에서 제로웨이스트나 비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수 많은 포스트들이 뜬다. 사람들은 이미지를, 구호를, 루틴과 리추얼, 새로운 질서와 즐거움들을 만들어냈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제로 웨이스트로 집안 살림을 하는 방법들, 플로깅이라는 활동 또는 산책의 양식, 도시농업과 가드닝 문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웹 개발법, 비건 식당들과 그 식당들의 지도, 해외의 기후위기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번역한 것, 환경을 아끼는 실천과 자신을 돌보는 수련을 연계하며 연결감을 느끼는 리추얼 등등. 작은 공론장과 마을 리빙랩, 시민연구 등 시민 활동 지원들에서도 기후 관련 된 실천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였다. 필연적으로 커먼즈 일 수 밖에 없는, 이 행성 자체에 대한 이슈다보니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지역 커뮤니티까지 일단 팔을 걷어부치고 각자의 영역 안에서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실천들이 계속 보였다. 물론 기업들은 이 공익적 생산성을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해석하고 재빠르게 그린워싱에 들어갔다. 글로벌 금융 시장이 가장 빠르게 반응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시민 불복종과 포스코와 같은 거대 자본에 대한 게릴라식 직접 행동들도 있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2019년엔 기억할만한 대규모 집회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 가을, 기후정의행진 그때를 상회하는 인원들이 또 모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실종된 건 뜻밖에도 정치다. 더 정확하게는 대의 정치, 특히 지역보다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의 정치가 이 생산성을 권력화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예비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급진적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할 믿음만한 권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이는 비단 기후 정치만이 겪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난 대선에서 팬덤 정치는 더 적나라해졌고 당 파성은 모호했다. 에코백과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후보를 찍을까? 이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시사인』 749호(2022.1)에서 진행한 기후유권자 설문조사에서는 내 정치성향과 달라도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8.8%로 기대 이상으로 높았지만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기후위기가 가장 화제가 되었던 순간은 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 후보가 티브이 토론에서 RE100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정도다. 6월에 치른 지방 선거에서도 녹색당을 비롯해 기후 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진보정당들이 받은 성적표는 대체로 지난 선거 때보다도 낮았다. 의제가 있는 정치세력은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하지 못했고, 가시성을 확보한 기성 정당들은 여느 때와 같은 부동산 개발공약에 집중했다.

기본소득은 완전히 정책의제처럼 보였고 2016년, 17년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 생각보다

회자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기본소득이 기후위기와 탈성장과 전환에 부합하는 의제라고 믿고 있다. 탈성장과 전환은 시간의 재구조화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기본소득은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할 거의 유일한 재분배 정책이다. 사회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한 경제적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도넛경제학이나, 직주근접 근거리 생활권을 제안하는 15분 도시와 같이 적정 수준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을 제안하는 모델들에 부합하는 복지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기후위기가 현실을 압박하는 에너지가 커질 수록, 우리 삶의 변화가 더 급격할 수록 기본소득 운동, 기본소득에 대한 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조직하는 일도 더 절박하게 필요해진다. 달라진 환경에서 여전히 기본소득 운동이 유효한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새삼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렸고,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이 갈 길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면 유의미한 질문은 전환모델과의 정합성 같은 것보다도 어떻게 기후유권자들과 제도권 정치를 연결지을 수 있는가?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소시계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는 기후위기 앞에서 빠르게 많은 것을 실험하며 상호학습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짜 기후정치’는 경험해보지 못했다. 선언까지만 있었다. 기후를 최상위에 둔 의사결정이 실제 경제시스템과 사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매장 내 일회용품 금지 정도가 있을까? 원래 진보적인 유럽 서구국가에서 USB-C타입 충전기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기사 정도가 근래 화제가 된 뉴스였던 것 같다. 기후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컨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새로 발간한 보고서라든지, 국제 회의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후정치 자체에 대한 뉴스는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국내 석탄발전소들을 문 닫게 하려면 어떤 정치적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방법도, 방향도 공유받기 어렵다. (근거나 당위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여도 탄소중립위원회는 모를 수도 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기후시민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을 공유한 정치적 집단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가 기후이슈에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반응하는 원인일 지도 모르겠다. 만약 기본소득이 기후위기에서 파생된 적정경제, 지속가능한 경제의 모델들과 만나 설득가능한 내러티브로 잘 자리잡는다면 비로소 기후시민들을 ‘이해관계자’로 가시화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시작할 때의 장면으로 돌아간다면, 생태적 삶의 방식을 체험하고 싶어서 지역에 올 정도의 적극성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도시에서 먹고 살려면 반생태적 선택을 거듭하게 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받고 일을 적게 하면서 지역에 살면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연상이 아주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다면? 같은 이야기다. 물론 이 정도 발상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고 필연적인 입구가 필요하다. 반드시 개혁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지점과 관련성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연금개혁과 안정적인 가구소득 흐름, 금융시스템과 연결되는 논의. 혹은 정규직 일자리 및 복지 수혜자의 지위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한국의 주거금융 시스템과 기본소득. 초고령시대의 이미 시급한 문제인 돌봄과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와 연결되는 기본소득. 이 모든 것을 한 바닥에 그려내는 것도 물론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청사진을 그리는 것보다도 지엽적인 경로를 파고드는 일이다. 가급적이면 대화와 토론 할 주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깊이 자기 삶의 문제로 인식하는 영역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경제를 대변하는 기본소득의 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내 짧은 시야에서는 여기까지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 나는 BIYN에서 기본소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작은 공론장들을 만들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던 시기에 기본소득은 어디로든 접속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에 참여하기 위한 도구들을 만들며 생산하는 운동을 해왔다. 더 이상 소수의 지식인이 이론을 재생산하고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은 모델과 패러다임보다는 사례에서 훨씬 큰 영감을 받기 때문에 그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 어딘가 우리가 모일 곳이 필요하기는 하다는 생각이다. 한 줄의 짧은 목표, 쟁취해 낼 수 있는 목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홀로는 그게 잘 안된다. 기본소득과 기후위기, 하나의 큰 아이디어와, 거대한 공통의 위기. 시간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 노동은 더 유연해진 시대, 직접 지급되는 현금이라는 장치로 우리가 어떻게 적정 수준의 삶과 온당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 가급적 쉽게. 누군가의 얼굴을 상상하며.